

“지자체 경쟁 속 광주·전남 AI산업 발전 협력해야”

AI산업·컴퓨팅메카 육성 정책토론회

에너지AI 육성·농업혁신 실증축 정책 제안
지역인프라 연계 車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이개호 “컴퓨팅센터 갈등 아닌 상생 기회”
광주·연구·인재...전남·전력·컴퓨팅’ 거점

광주·전남이 각각 보유한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우수 자원을 토대로 상생·보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전남의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로 지렛대 삼아 자동차와 재생에너지 등 지역별 핵심 사업을 속도감있게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융합학과는 29일 조선대학교 장항남 정보통신박물관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AI 산업 및 컴퓨팅 메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정부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AI 관련 사업 유치·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광주·전남이 가진 인프라와 장점을 토대로 AI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배상현 조선대 대학원 과학기술융합학과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종권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AI연구소장, 조민호 고려대학교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양미에 조



광주·전남 AI산업 및 컴퓨팅 메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9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장항남 정보통신박물관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김애리 기자

선대 대학원 과학기술융합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권 에너지AI연구소장은 ‘전남·광주 에너지 AI 산업 촉진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전남의 AI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종권 소장은 “광주와 전남은 각각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인공지능사관학교 등을 통한 인재 양성과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SK-오픈AI 데이터센터,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등 AI 산업 육성에 성과를 내고 있지만 관련 업체와 후방 산업 유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속 가장 큰 문제인 간헐성 해결과 효율화를 위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 육성 등 막대한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에너지 수도 광주·전남의 특화 분야를 살려 에너지AI 분야 집중 지원, 에너지AI 실증단지 조성, 고급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민호 고려대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광주·전남권 AI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현실적 해결책과 정책’ 주제발표에서 AI와 연계한 지역 핵심 산업 육성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자동차 산업은 국내 핵심 산업이지만 하드웨어 관련 기업·기반은 잘 구축된 반면, 차량용 반도체 등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도 낮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실증단지 등 AI 산업 기반과 함께 미래차 소재·부품·특화단지를 갖춘 광주가 대규모 AI컴퓨팅센터와 데이터센터가 있는 전남과 협력해 제품 개발에서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용 AI 및 소프트웨어 직접화 단지를 구축하면 막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전남이 해남 솔라시도에 국가AI 컴퓨팅센터 유치에 성공했지만 인프라와 고급 인재 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 유치 등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며 “해남 솔라시도가 국내 AI 산업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선 ▲임주 AI 기업 대상 AI컴퓨팅센터 사용료 대폭 할인 ▲영어 공용어 사용 등 국제도시화 시도 ▲해외 학위 우수 인재 파격적 대우 초빙 등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미에 조선대 대학원 과학기술융합학과 교수는 ‘국가AI허브 전남, 컴퓨팅 팜 프론티어’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 농업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전남은 농생명 산업 중심이지만 농지 감소, 기후변화, 국제 경쟁 심화, 유통구조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대외환경과 농촌·농업환경 변화 속 AI 스마트농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따른 기술 우위 확보와 실증 가능성이 증대된 만큼 전남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자금 기반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AI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과 인재 양성 등을 추진, 전남이 국가의 AI 농정혁신의 대표 실증축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개호 국회의원은 “최근 국가AI컴퓨팅센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광주·전남 간 경쟁 구도가 있었지만 이는 갈등이 아니라 상생의 기회”라며 “광주는 연구와 인재 중심 기반을, 전남은 전력과 컴퓨팅 중심의 산업기반을 구축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전남 ‘지역사랑상품권’ 5% 추가 환급

내달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後개시백 포함 최대 18-20% 할인혜택

전남도는 29일 “오는 11월9일까지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통합 할인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 5% 추가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할인 캠페인이다. 전남도는 도민에게 후케시백 포함 최대 20%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열리는 통합형 국가 소비 축제다. 제조·유통·소상공

인 등 3만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교통·숙박·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과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국민이 제갈할 소비 혜택을 통해 내수 회복과 지역상권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목표다.

전남도는 행사 기간 총 534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모든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후케시백을 포함, 최대 18-20%의 할인 혜택을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도민에게 실질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침체한 지역상권 매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에 맞춰 도민이 제갈할 전남형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전세사기 대응 종합지원센터 운영

내달 3일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금융·주거 등 피해자 맞춤서비스

광주시는 29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주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시청 1층에 마련해 오는 11월3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주거·금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지역 거점 기관이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꾀할 계획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관련 소송,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금융 지원(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상담), 주거 지원(공공 임대주택 긴급 주거 지원, 피해자 월세·이사비

지원) 등 피해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시청 1층 민원봉사실 내에 마련됐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시민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 상담(062-613-4875 ~4877)을 통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지원·사전 예방·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전세사기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본격 강화한다.

‘안전계약상담(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해 예비 임차인들에게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인다. /변은진 기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거리를 두고 일단 멈춰주세요.
보행자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